

보도자료

국정감사 간이평가

2025.10.28.(30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02)523-8760 goodlaw@goodlaw.org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아스텍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조희대 대법원장(대선 개입의혹), 김현지(국정농단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정쟁

2025년 국감(22-2)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 / F학점

▣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 / 무너진 사법부 독립

법제처장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는 대통령 5개 범죄 혐의 '전부 무죄'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활약(?)

- ▲ 헌정사상 처음으로 참고인 된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 /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 ▲ 대법원장 이석 불허 90분 감금논란(10.13. 법사위-대법원) / 대법원장 이석 안시키고 질문 계속논란(10.15. 법사위-대법원)
- ▲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간사 없는 국정감사 / 간사는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49조②위원장은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를간사와협의하여정한다.)
- ▲ 고성 항의로 각규택 의원 발언권 제한(10.16. 법사위-감사원)
- ▲ 발언권 제한 중 각규택 의원의 발언순서를 변경(10.17. 법사위-군사법원)
- ▲ 질의방해 최혁진 의원과 질의 중 주진우 의원의 다툼으로 둘 다 퇴장명령(10.21. 법사위)
- ▲ 고성 항의로 신동욱 의원 퇴장명령(10.23. 법사위)
- ▲ 편파 진행 논란으로 연일 파행 - 고성·삿대질·서서항의 등
- ▲ 감사위원보다 평균 2.81배 발언을 한 위원장
- ▲ 위원장의 국정감사 중 질의 및 발언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6~30쪽 참조

《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의원들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국정감사 현황 - 10.23까지》

위원회	위원장	감사일	대상기관	의원질시간(평균)	위원장질의·발언시간	의원질의 대비 위원장시간 비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최민희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	0:21:17	1:29:36	4.21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10.21.	한국철도공사	0:09:37	0:37:54	3.94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7.	군사법원	0:10:52	0:42:21	3.9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철규	10.20.	한국석유공사	0:14:15	0:54:53	3.85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7.	헌법재판소	0:06:42	0:24:44	3.6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최민희	10.23.	한국방송공사	0:19:06	1:03:09	3.31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23.	서울고등검찰청	0:19:01	0:59:43	3.14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3.	대법원	0:17:58	0:54:10	3.01

■ 국감초유의 감사기간 중 과방위원장(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카드결제 청첩장→화환 요청→ 고액축의금 반환까지 모두 상식밖)

- ▲ 피감기관 화환과 축의금은 각 기관의 공금(?)으로
- ▲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음 / 피감기관인 방통위-위원장실에서 화환요청
- ▲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 / 최민희 위원장의 ID로 예식장 예약

■ 국정감사,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감사위원, 피감기관 간부, 기자들까지 퇴장 조치 / 과방위(위원장 최민희)

- ▲ 위원장-보도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보고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켜 (10.20. 과방위-오후 국감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됨)
- ▲ 감사위원인 박정훈 의원에게도 퇴장명령(10.14. 과방위-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 ▲ 국정감사 중 취재 기자에게도 퇴장명령(10.16. 과방위-원자력위원회)

■ 2025년도 국감의 최대화제 : 김현지 '카더라' 국감(만사현통 vs. 일 잘하는 1급 공무원)

- ▲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변경 의혹(운영위-종인채택 회의 지연)
- ▲ 산림청장 천거 인사개입 의혹(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 ▲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의혹(법사위-법무부)
- ▲ 재산증식 의혹(행안위-인사혁신처 자료제출 요구)
- ▲ 대선자금 관리의혹(법사위-현재 녹취공개) 등 불거져 나온 각종 루머
 - △ 김현지 논란(10.21. 행안위-경기도청)
 - △ 김현지 논란(10.21. 농해수위-산림청)
 - △ 김현지 휴대폰 삭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명예훼손으로 고발(10.21. 이성운, 김동아 의원)
- ▲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10.23. 서울고검 국감 전)
- ▲ 산업위 중소기업 경영난 논란에도 등장(10.23. 중소기업진흥공단)
- ▲ 박지원 의원, 법사위에서 PPT 사용하여 김현지 유언비어 공개 (10.23. 16:55경)

■ 대질신문장으로 변질된 국정감사장

- ▲ 법사위 법무부(10.15.)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에 증인 신문(연어회식 회유 의혹)
- ▲ 법사위 서울고검(10.23.)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의 대질신문(술반입 의혹)
- ▲ 법사위 서울고검(10.20.)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사건 처리 외압·회유 논란)
- ▲ 행안위 서울시(10.23.)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공짜 여론조사)

■ 공자학원 등 중국(인) 관련 질의 다수

- ▲ 정부의 실용외교 문제 지적(10.13. 외교부)
- ▲ 공자학원 난립문제(교육위)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 <서지영 의원>
- ▲ 중국인 무비자 입국문제(복지위, 문체위, 행안위, 외교위 등)
- ▲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논란 문제(복지위)

■ 불성실하고 맹탕인 국정감사

- ▲ 정시에 감사개시된 국정감사는 단 3곳뿐 / 과방위(10.13.) 기재위·국방위(10.21.)

- ▲ 기후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국감은 10월 17일 10시 4분에 감사개시해서 11시 51분에 감사 종료하고 김포공항 등 현장시찰(당일 피감기관 17개 중 16곳은 질문을 받지 못함)
- ▲ **국회법 처리로 소관기관이 바뀜** - ‘시험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 (10.13. 기후노동위 파행)/ 산업위는 국감 중 국정감사계획서 변경(10.15. 감사기관 61개→40개로 변경)
- ▲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 한 위원회도 3개** / 국회법에는 국감 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기재위**(위원장 임이자), **운영위**(위원장 김병기), **산자위**(위원장 이철규) <10.24. 현재>
- ▲ 국회법상 **30일 할 수 있는 국감을 18일만**, 그것도 자료준비(위원회당 일주일에 2,3일)한다고 쉬고 시찰(총24회)간다고 쉬어서 **실제 감사일자는 위원회당 7-8일에 불과** / 역대 최다의 감사대상기관 (813개, 2024년 802개 보다도 11개 늘어)-- **질문 안 할 거면 왜 부르나?** 10월 22일까지 474개 기관 중 **180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37.97%)**

《기관종인 중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수》 (통계기간 : 2025.10.13.~10.22)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받지 못한 기관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72	31	43.06%
정무위원회	42	17	40.48%
기획재정위원회	10	1	10.00%
교육위원회	25	3	1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9	14	48.28%
외교통일위원회	10	3	30.00%
국방위원회	46	31	67.39%
행정안전위원회	20	7	3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9	7	17.9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2	9	28.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1	7	22.58%
보건복지위원회	37	12	32.4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	32	51.61%
국토교통위원회	19	6	31.58%
계/백분율	474	180	37.97%
※ 법사위는 1차, 2차 대법원 피감기관은 동일하나, 각각 7개 기관으로 합산한 것임.			

- ▲ 정기국회 전 30일을 국감기간으로 정했으나(2012년) 안 지키고 예외로 운영

《현행 국정감사법이 실시된 이후 국정감사의 국감기간 현황》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제19대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2012	2012.10.5.(금)	2012.10.24.(수)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3	2013.10.14.(월)	2013.11.2.(토)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4	2014.10.7.(화)	2014.10.27.(월)	21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5	2015.9.10.(목)	2015.10.9.(금)	23일
제20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6	2016.9.26.(월)	2016.10.18.(화)	23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7	2017.10.12.(목)	2017.10.31.(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8	2018.10.10.(금)	2018.10.29.(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9	2019.10.02.(수)	2019.10.21.(월)	20일
제21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	2020.10.07.(수)	2020.10.26.(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1	2021.10.01.(금)	2021.10.21.(목)	21일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2	2022.10.04.(화)	2022.10.24.(월)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3	2023.10.10.(화)	2023.10.27.(금)	18일
제22대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4	2024.10.7.(월)	2024.10.25.(금)	19일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2025	2025.10.13.(월)	2025.10.30.(목)	18일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2025년도 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감사기간은 2025.10.31.(금)까지로 되어 있으나, 14개 상임위원회 모두 10.30.까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됨

▣ 청년 대학생 모니터가 본 2025년도 감사위원 ▣

(1) 국정감사 이래서 실망

- 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미국 비판 중심의 감정적 질의로 균형성 부족. 외교 현실 고려 없이 비판 위주로 진행되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졌다. / 신○○(서울대)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깨어들거나 질의 과정에서 피감기관장을 범죄인 취급하듯 고압적인 어투로 수사하는 듯하였다. / 강○○(연세대) 질의주제가 중복되어 타 의원의 질의 내용을 녹음해서 하는 듯 실효성 없는 감사로 국민의 시간을 허비했다. / 김○○(서울대) 철저한 준비로 피감기관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연성을 높여서 공격형 발언을 일삼았고, 정밀한 수치로 따지기 보다는 감정적인 언사로 피감기관을 압박했다. / 장○○(성균관대) 의혹이나 예산 특혜 등 기관의 근본적인 부정비리 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흡했고, 질의의 범위가 지역 사업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감사 실효성이 낮았다. / 전○○(서강대) 내년 선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지역 현안에 치중된 질의면서, 시청각 자료나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없었다. / 홍○○(카이스트) 질의를 가속도를 붙여 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자극적인 언사로 과학기술현안이 동떨어진 질의를 많이 하였다. / 김○○(연세대) 다른 의원의 질의 중에는 자리를 뜨면서 감사진행을 방해하였다. / 기타로 두 번의 질의 시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정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주를 이뤘다. 매너 또한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 되풀이 하는 모습, 지검장 증인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함은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욕박지르고, 답변 기회조차 안 주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장관의 특정 종교 축사와 같이 정책적인 질의보다 정치적인 질의를 하며, 방사청과 방첩사 간의 불법 정보 공유 및 감시에 관하여 예민한 사항은 맞으나 질의를 빙자하여 방사청장의 비리사실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2) 그럼에도 이런 점은 희망

- 김○○(연세대) 그저 준비한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숙지가 잘 된 상태에서 질의하여, 청자로 하여금 질의 내용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 강○○(서울대) 중립성을 어느 정도 지키며 정쟁에 관한 사안이라도 특정 정당을 폄하하지 않고 감사 기관에 대해 지적할 부분을 지적했다. / 윤○○(고려대)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중국인 투표권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선거관리주체인 선관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신뢰성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다. / 백○○(한양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정권교체기라더라도 전문성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였다. 이○○(서울대)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 하○○(동국대)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겠다”는 발언처럼, 정치적 공방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한강버스의 효율성, 노후 하수 문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요점 위주로 짚어 내며 서울시정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양○○(한국외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국을 치르는 질의를 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 김○○(경희대) 실거래가 표본과 호가 표본을 주간 통계와 월간 통계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제안을 하고, 이를 영국과 관련한 예시를 들어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 양○○(서울대) 공수처 탄생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성과없는 모습을 지적하고, 공수처의 권력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주문하는 모습이 좋았다. / 엄○한(고려대) 응급의료취약지의 현황에 대해 시군구로 지정된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며 요구한 점이 인상 깊었다.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 <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했다.<<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발표예정임>>

모니터링을 주관한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인 어네스트 바크 교수(캠브리지대학교)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① AGREEMENT TO DIFFER(의견의 불일치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 ② COMPROMISE(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 ③ MAJORITY RULE(①②항목으로 최선을 다한 후 최후수단으로 다수결)”이라고 전제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새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 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의 자세한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1. 2025년 국정감사 간이총평 : 역대 최악의 낙제점(F학점), 저질국감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새 정부의 정책을 상호 비교하면서 잘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1) 최악의 삼권 분립 위기 초래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핵심원리가 권력분립(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인데, 국정감사 기간(10.15.) 중 국정감사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이유로 대법원 대법정의 법대를 점령하고 기념촬영을 하였고, 법을 해석하는 정부기관인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장(10.24.)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 범죄가 모두 무죄라고 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존립근거까지 훼손해 충격을 주었다.

(2) 국정감사 준비 부족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극한 대립을 하였고, 국정감사 직전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국정감사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법 처리로 인해 소관기관이 바뀌어 '시험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의 표현)인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3)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대립

9월 정기회 전에 국정감사실시 안건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기회 중(9.25.)에 이러한 안건(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을 채택하였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국민의 힘에 대해 상호존중이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없어져야 할 위헌정당, 내란잔당, 범죄자 옹호당이라고 지칭하면서,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까지 선출하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국정감사 도중에도 여러 국감장에서 고성과 막말 등으로 표출되었다.

(4) 반발만 초래한 '조희대' 국감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내란잔당 청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예비후보시절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명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 두면서 답변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파행이 야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법부독립 침해, 삼권분립 위배의 우려를 초래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파기환송심의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정쟁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의 진정성도 희석되었다. '15억은 서민 아파트'(국토위의 복기왕 간사)발언과 새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로 10.15. 부동산정책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5) 무기력한 ‘김현지 카더라’ 국감

야당(국민의힘)은 양원제국가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사 선출권 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카더라’ 공격과 증인채택 추진을 하였으나, 결국 한 곳도 채택하지 못하였고, 근조 리본을 달고 시작했던 양평 공무원 사건과 불거져 나온 주식의혹 문제를 조명하려고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야당으로서 투쟁력 상실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위원장석 점거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한 검은 리본을 달고, 위원장 주위에 서서 항의·고함·집단퇴장)

(6) 정책승부가 아닌 파행만 초래

지난해와 같이 131명의 초선 의원의 국감스타급 활약은커녕, 몇몇 의원은 좌충우돌로 오히려 파행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우영 의원(과방위)은 10월 14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의 욕설 메시지를 공개하여 파행을 초래하였고, 정혜경 의원(기후노동위)은 10월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발언 중에 끼어들기를 하여 파행을 야기했으며, 최혁진 의원(법사위)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모욕 사진을 손팻말로 들어 소란케 하였고, 마이크를 들고 동료의원(과규택 의원)의 발언권 제한을 제안하고, 동료 의원(주진우 의원) 질의 중에 발언 방해로 퇴장조치 되는 등 파행을 초래하였다.

(7) 최악의 저질 행태와 유튜브 쇼츠 장면 연출

더욱 국정감사 중 불거져 나온 국정감사장에서의 피감기관 모욕 사진, ‘똥’ 발언 등 부적절한 언어, 욕설 메시지 문자 파문,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 등 국정감사의 맥을 잃게 하는 저질 행태가 특히 많았으며, 정책 점검보다는 유튜브 ‘쇼츠용 장면’ 연출에 치중했다.

(8) 국익과 민생사안은 등한 내지 미흡

결국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한미관세협상과정과 대책, 치솟는 아파트값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 청년들을 외국취업사기 범죄에 빠지게 하는 청년실업사태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대책, 거세지는 미국·중국의 압력 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과 기업구조 개선, 다양한 국제적 해킹 시도와 국감직전 벌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미래의 위협하는 건보재정, 연금재정 고갈 사태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였다.

(9) 국회의 최고 권한 행사, 스스로 포기

또한, 국회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30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18일간을 국감기간으로 정하였고, 그것도 상임위별로 현장시찰 감사준비로 감사기간이 실제

로는 7-8일에 불과해 스스로 국정감사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또한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권리) 증인을 겁박하는(10.24. 법사위-법제처) 등 막장행태를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감사도중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과 동반하여 출장을 나가는 것도 여전하였다.

2. 2025년도 국정감사(제22대 국회 2차년도)의 특징

(1)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 교섭단체 간사 없는 국정감사로 법사위원회 매일 파행

- 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인 교섭단체 선출 안건을 미루다가 부결시킨 뒤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과 개의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의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veto)권을 행사하여 주장 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고, 상대팀 출신의 심판이 선수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계속한다며 옐로우카드, 레드카드를 남발하고, 일방적인 시합진행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기본적으로 공정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공정성은 지켜질 수 없다.

- ※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 제1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 ※ 사전 간사협의 준수규정(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15대 국회말부터 모니터링해 본 바, 간사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우는 단 2건이었다. 하나는 2001년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새천년민주당 간사였던 유삼남 의원이 사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어서 하루 공백이 있었는데, 다음날 배기선 의원이 보임해 곧바로 간사 선임되어 활동한 바 있다.(2001. 9. 11,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
- 다른 하나는 200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으로, 국정감사직전 정당의 분당이 있었고,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열린우리당으로 개명) 추천이 없어 제3당으로 전락한 당시 여당간사없이 민주당만 간사가 선임되어 진행된 사례.(2003.9.22) -- 당시 송훈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이어서 간사가 없어도 3당 협의가 되었음.(다른 위원회는 9.22. 분당된 두 당의 간사를 모두 선출함)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간사가 사임하자 10.14.최우선적으로 간사선임이 이루어짐

- ② 10월 13일 인사말을 하러 온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으며(야당으로부터 감금이란 항의를 받음), 말 한마디로 대법원장을 참고인화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였다.
- ③ 10월 15일 돌격대처럼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 법대에 올라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으며, 감사계획서를 변경하여 2일차 대법원 국정감사를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 ④ 감사위원의 발언권 제한(10.16. 감사원)과 하루에 두 번 퇴장명령(10.23. 서울고검 등) 등 헌법 어디에도 없는 '퇴장하세요'가 일상화되었다.
- ⑤ 지난해(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법사위는 정시 감사개시를 정착하였는데, 올해에는 정시 감사 실시는커녕 국정감사 도중 속개일시를 정하지 않는 채 파행

하여 언제 속개되는지 모른 채 기다리도록 하였다.

- ⑥ 감사위원의 평균질의시간보다 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3배 이상 많은 경우가 4번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10.15. 반쪽 대법원 국정감사와 10.21. 대전고등법원 등 감사는 영상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2) 국감 사상 초유로 국정감사기간 중 상임위원장 자녀의 결혼식과 낯뜨거운 국정감사장에서의 진실공방

- ① 지난해(2024)에도 국회의원의 발언권 제안 소동으로 파행을 빚었던 최민희 과방 위원장은 올해에도 감사위원 퇴장명령 소동으로 파행을 빚었으며, 기자 추방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② 더욱 국정감사 2주차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10월 18일에 있었던 최민희 위원장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 ③ 10월 20일, 박정훈 의원이 결혼식 사진을 공개하며 축의금 문제를 지적하였고, 최민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녀가 주도적으로 하였을 뿐, 본인은 양자 역학 공부 때문에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④ 10월 21일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청접장을 돌리지 않았다는 해명도 나왔다. 10월 23일, 박정훈 의원이 국회사랑재를 최민희 위원장의 ID로 예약했다는 것을 공개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자녀가 자신의 ID를 가지고 예약했다"고 하였으나, 당일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화환요청을 한 사실(이진숙 전 위원장 제보)을 공개하였다.
- ⑤ 10월 24일 박정훈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당일 11:01경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실의 화환요청과 축의금 집행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회의원 이름을 자기집 개부르듯이 하는데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 ⑥ 언론에는 100만원 등 고액 축의금을 반환하는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3) 짧은 국감기간(2024년도 143일→2025년도 139일로 4일 줄어) 중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813개 기관, 2024년 802개 기관보다도 많아)

10월 22일까지 진행된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74개 피감기관 중 37.97%인 180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했고, 이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기관중인 중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수» (통계기간 : 2025.10.13.~10.22)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받지 못한 기관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72	31	43.06%
정무위원회	42	17	40.48%
기획재정위원회	10	1	10.00%
교육위원회	25	3	1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9	14	48.28%
외교통일위원회	10	3	30.00%
국방위원회	46	31	67.39%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받지 못한 기관	비율
행정안전위원회	20	7	3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9	7	17.9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2	9	28.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1	7	22.58%
보건복지위원회	37	12	32.4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	32	51.61%
국토교통위원회	19	6	31.58%
계/백분율	474	180	37.97%
※ 법사위는 1차, 2차 대법원 피감기관은 동일하나, 각각 7개 기관으로 합산한 것임.			

가장 많은 피감기관이 하루에 당일치기로 감사를 받는 과방위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10.24.) 국정감사를 합친다면 더 많은 기관이 질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 국회법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뀐 기관의 경우에는 질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조직개편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뀐 가운데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공단 등 21개 대상기관 중 9개 기관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4) 여당의 중진의원 7명이 장관(피감기관장)으로 활동

국방위는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창이 아닌 방패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일부 장관은 시차적응(?)을 하지 못해 피감기관장의 자세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감사위원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국방위)과 함께 8명이 자리를 비워(청가) 겸임 장관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 ① **안규백 국방부장관**(5선, 기재위)은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내란' 논쟁으로 언론에 조명을 받았다.
- ② **정동영 통일부장관**(5선, 과방위)은 외통위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2국가론'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피감기관인 검사장에게 "개인의 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하였는데 반해, 정동영 장관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이 장차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서 눈총을 받았다.
- ③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5선, 복지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통령 연예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반론을 하는 등 피감기관장이 아닌 여전히 감사위원의 태도를 보였다.
- ④ **정성호 법무부장관**(5선, 기재위)은 검찰청 폐지와 백해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과 관련하여 곤혹적인 상황이었다. 치아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도 나왔다.

- 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3선, 문체위)은 아파트 값 상승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부동산정책 관련 규제강화, 결국 토허제 확대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 ⑥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3선, 산업위)은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이전 문제가 조명되었다.
- ⑦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3선, 산업위)은 국정감사 직전 조직개편으로 업무보고도 안된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어 파행이 초래되기도 하였는데, 10월 16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였다.

(5) 증인 출석요구, 채택 없는 ‘카더라’ 증인 논란(최대 화제) : 김현지는 누구 (만사현통 vs. 일잘하는 1급공무원)

2025년도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논란이 벌어진 이후였다. 운영위에서 지금까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거론되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 ① 10월 14일(농해수위) 산림청장 천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
- ② 10월 14일(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의 교체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화영 증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 ③ 10월 15일(행안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신고 내역 자료제출 요구로 논란이 되었다.
- ④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대선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공개하였다.
- ⑤ 10월 23일(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4선 중진 의원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영상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내연녀, 김정일의 딸 등’이 여과 없이 생중계 되었다. 당일 김현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⑥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도지사 시절 근무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 ⑦ 농해수위에서는 천거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은 산림청장 때문에 아무런 주목도 없었던 산림청이 화제가 되었다.
- ⑧ 10월 21일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휴대폰 삭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김동아 의원 등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러가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 ⑨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6) 위원장의 감사위원 발언권 제한, 퇴장명령 남발

지난해(2024)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최수진 의원의 국정감사질의 중)이 1회 있었는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언권 제한·퇴장 논란이 수차례 벌어졌다.

- ① 10월 14일 과방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 ② 10월 16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광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제안했다(파행).
- ③ 10월 17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간에 추미애 위원장이 광규택 의원의 질의순서를 임의로 조정하고, 발언권 제한을 말하여 파행했다.
- ④ 10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의 질의시에 최혁진 의원이 쳐다봐서 고성인 오간 가운데 둘 다 퇴장명령을 받았다.
- ⑤ 10월 23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의원 등에게 퇴장을 명하여 밤중에 연거푸 파행했다.

(7) 국정감사장에 증인 참고인 불러 대질신문장으로 변질

- ① 10월 15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검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 ② 10월 23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의 대질(대북송금사건 연어회유 사건에서 페트병 술병 반입 여부)이 있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 ③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사건 처리 외압·회유 논란)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담당검사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불기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청장의 지시였던 말을 두 번이나 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싶다"고 맞섰다
- ④ 10월 23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오세훈 사법리스크 논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는 '오세훈-명태균 공방전'이었다. 명태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에 제공하고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의 인물인데, 증언대에선 "오 시장이 울며 부탁했다"거나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등 주장을 하였고, 오 시장은 명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답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8)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현장 국정감사와 감사위원의 감사 중 캄보디아 방문

- ① 10월 22일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②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참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인질구

출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결국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9) 교육위의 공자학원 등 중국(인) 관련 질의 다수

① 정부의 실용외교 문제 지적 (외교위-10.13. 외교부)

② 공자학원 난립문제(교육위-국립대학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다"며, "강원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중국인 무비자 입국문제(보건복지위까지 논란이 됨)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문제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결핵 환자 중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무비자 입국 단계부터 결핵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건보 부정수급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질타했다.

3.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단평 : 최고는 없고 최악만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국정감사 파행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고성과 샷대질의 연속이었다. 국감사상 최초로 교섭단체(야당) 간사 없는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불출석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지난해의 85명 일반증인보다 많은 88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범여권 주도로 국정감사 도중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였으나, 야당(국민의힘)이 제안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중기 특검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부결처리되었다.

지난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시 국감개시 원칙을 정착시켰는데, 올해에 정시 개시는 없었다. 10월 16일, 피감기관 증인이 감사위원(박지원 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10월 24일 일반 증인(전 법제처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간사 강준현, 강민국)

비교적 조용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부산금융센터에 대한 현장 시찰이 있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촉구 등이 이슈화되어 조명되었고, 한미 관세협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이 문제가 되어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정태호, 박수영)

어려워진 민생 문제 때문인지 정책국감이 이루어졌다.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었으며, 조세제도 개편 문제, 한미관세협상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새로 명칭이 바뀌어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한미간 통화스와프 논의가 없었다는 발언도 나와 충격을 주었으며, 수사 중 관봉띠 분실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현금관봉띠(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가 공개되었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간사 고민정, 조정훈)

국정감사 전 위원회 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은 여야 타협에 의해 국정감사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자긍심을 표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국민의힘이 거부한 가운데 처리되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감사가 진행되었다.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 국정감사 현장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어, 공자학당 실태와 학교에서 북한노래가 지도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최형두)

저질 국정감사 모습을 한꺼번에 보인 감사현장이었다. 우선 위원장의 편파진행논란이 있었다. 국정감사 도중 의원 간 욕설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어 파행되었고, 욕설 논란으로 징계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쫓아내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업무보고 시에 피감기관 본부장에 대한 퇴장명령 논란이 있었다. 국정감사상 초유로 국정감사기간 중 위원장 자녀의 국회 내 결혼식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되기도 하였다. 해명과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간사 김영배, 김건)

한미관세협정 진행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국회방송이 첫날 생중계를 하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평화적 2국가론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외공관 현지감사는 강행했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간사 부승찬, 강대식)

국방부, 합참, 저작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5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재판중인데 '내란'

이란 용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3일 연속 지적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하였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내란 해석 답변이 조명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간사 윤건영, 서범수)

국정감사 전에 터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원장의 사과가 있었다. 이 기관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국가전산망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기관증인이 되지 않은 채 감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 책임으로 사퇴촉구까지 받았으나 국정감사장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끼어들기 답변도 하였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논란이 전개되었으며,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수사권 문제가 조명되었고, 특검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공무원 사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도 점검했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간사 김교흥, 박정하)

지난해에 이어 일주일에 2일 감사하고 하루 시찰하는 감사를 하였는데, 정작 논란이 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회루·근정전 방문이 이슈화되었다. 하루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베풀치기로 감사하였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홀대와 '겉핥기'식 국정감사라는 비판이 여전했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여기구, 간사 윤준병, 김선교)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때문에 여야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올해에는 증인채택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난해와 같은 모습은 없었다. 산림청 국정감사가 조명되었는데, 산림문제가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채택 때문이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의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관련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간사 김원이, 박성민)

첫날 한·체코원전사업과 관련해서 막말과 매국논란으로 파행을 하였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일정이 바뀌기기도 하였다.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23시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다. 정선에서 현장시찰이 이루어졌다. 산업위는 10월 24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완료하였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간사 이수진, 김미애)

조용한 위원회 중의 하나였다. 국정감사도 이전의 국회보다 매우 일찍 종료되었다. 건보재정, 국민연금 개혁 논란 등 파행성 이슈가 많음에도 조명이 되지 않았다. 건보재정과 관련하여 최보윤 의원이 부정수급의 70%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보도되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국립병원 연구비 부정, 의약품 남용 등 보건 분야

전반 점검과 취약아동 보호,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 체계 개선 요구가 많았다.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 김형동)

첫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전 업무보고 없는 국정감사 진행으로 인해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튿날에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문제가 크게 조명되었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간사 복기왕, 권영진)

지난해의 양평사태와 같은 대립은 없었지만, 관련 질의는 있었다. 부동산 대책이 이슈화되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조명이 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도 있었고, 철도공사 사고가 이슈화 되었으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구태는 여전

(1)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과 동행의원의 국감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을 돌면서 감사활동 격려를 했는데,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무려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 방문했고, 순방 일정에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이 동행했다.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 시간 제약으로 인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의 질의·답변

⇒ **국민의 충분한 알권리 차단 (감사위원별 마이크 꺼진 상태는 종합정밀평가시 발표)**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으로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한다.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 없는 국정감사를 하므로, 이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피감기관의 답변을 통해 질의내용을 유추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제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질의를 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3)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여전

813개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와 위원회 별로 신청된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문에도 턱없이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인데,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점검)을 모두 24회나 하였다. 원래 23회였으나, 10월 22일 복지위(위원장 박주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여,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후, 장애인 시설에 대

한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다.

<<2025년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현황>>

(10.13. 상임위 회의록이 올라온 경우를 분석한 것임.)

위원회	증인	참고인
법제사법위원회	88	44
정무위원회	32	9
기획재정위원회	2	5
교육위원회	8	2
교육위원회	4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2	42
외교통일위원회	0	2
국방위원회	3	2
행정안전위원회	53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4	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5	12
보건복지위원회	11	3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10
국토교통위원회	26	6
계	391	222

(4)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 회의 10월 22일까지 총 37회

모니터대상제외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분석해보면, 모두 37회 회의를 하였다.

주로 증인변경 및 추가 채택에 관한 것이었고,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가 2회 있었다.(법사위-대전고법 등, 교육위-교육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은 3건(외통위 1건, 산업위1건, 복지위 1건)이었다.

예전에는 국회 공보를 통해서 어떤 증인이 추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건만 표시하고 누가 언제 왜 증인으로 출석요구되는지는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이 늦게 올라온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었으나, 철회된 증인보다 추가 출석요구된 경우가 많았다(10.22. 현재 기준으로 증인 472명, 참고인 246명이었음.).

(5) 막말, 고성, 저질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상실

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꺼내 국정감사장을 난장판화했다.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의원 언니' 발언으로 가짜 뉴스 퍼나르기 비난이 일었다.

②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전화번호도 가리지 않은 채 공개해 논란이 있었다.

- ③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의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어디가 아프신 것 아니냐. 병원 한 번 가보시라"고 하여 파행하였다.
- ④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3일 산업위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사논 뚝' 발언으로 파행을 조장하였다.
- ⑤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이 큰 소리로 말하여 감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장 소음도 측정을 하였으면 최고의 데시벨(dB)이 되었을 것이다.

(6) 유명연예인 참고인 출석 이목끌기 여전

- ① '대통령 직속 K컬처 위원장' 박진영, 29일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 박진영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체위원회는 22일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명단(안)'에 올렸다. 박 공동위원장의 참고인 채택은 박정하, 정연욱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29일 국감장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과방위 썬양 참고인 출석
먹방 유튜버 썬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월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썬양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 수년간 협박과 돈 요구를 받았지만, 여성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5. 2025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 자료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정시에 감사개시가 된 경우

국감 첫날 국정감사 개시시각을 지킨 위원회는 과방위(위원장 최민희)가 유일했다. 10시가 지난 후에도 중계예정을 바라보아야 했다.
10월 23일까지 국회 공보를 확인해 본 결과, 재외공관 국정감사와 지방 분반국감을 제외하고 딱 3곳만 정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2025년도 정시에 감사개시된 국정감사 현황 >>

(분석기간 2025.10.13.~2025.10.23)

위원회	감사일자	감사종료	피감기관	감사장소	출석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3	19:3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정부청사	19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1	19:56:00	국가데이터처	국회	24
국방위원회	2025-10-21	12:26:00	육군지상적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12

(2) 2025년도 국정감사 중 11시 이후에 국정감사가 종료된 경우 15곳

2025년도 감사종료시간이 가장 늦게 끝난 것은 10. 16. 과방위(위원장 최민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로 자정을 넘겨 24시 52분에 마무리되었다. 육설문자 공개파문의 영향이었다.

<<23시를 넘긴 2025년도 국정감사 현황>> (분석기간 :2025. 10.13~10.23)

위원회	일자	개시	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06.	10:13:00	24:52:00	원자력안전위원회	8	국회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4.	10:07:00	24:30: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국회	19
행정안전위원회	10.14.	10:03:00	24:29:00	행정안전부	10	국회	22
교육위원회	10.20.	10:02:00	24:12:00	서울특별시교육청	3	국회	16
국토교통위원회	10.13.	10:05:00	24:11:00	국토교통부	3	국회	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3.	10:46:00	24:03:00	산업통상자원부	1	국회	28
교육위원회	10.14.	10:06:00	23:55:00	교육부	8	국회	16
외교통일위원회	10.14.	10:05:00	23:51:00	통일부	4	국회	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0.	15:31:00	23:41: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 KBS, 연합뉴스 TV)	0	국회	19
법제사법위원회	10.13.	10:13:00	23:24:00	대법원	7	국회	18
정부위원회	10.13.	10:12:00	23:24:00	국무조정실	27	국회	24
외교통일위원회	10.13.	10:12:00	23:24:00	외교통일부	6	국회	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10:04:00	23:06:00	고용노동부	1	국회	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20.	11:01:00	23:00:00	한국석유공사	10	강원랜드	27

(3) 2025년도 국정감사 중 가장 일찍 감사종료된 경우

2025년도 국정감사 중 가장 일찍 감사가 종료된 경우는 기후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국정감사로 10월 17일 11시 51분에 감사 종료하고 김포공항 등 현장시찰을 떠났다. 이날 피감기관은 17개 중 16개 기관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4) 하루 감사 중 파행성 정회가 많았던 경우

파행성 정회를 정의하기 어렵지만 여야간 논란으로 정회를 하면서 속개시각을 고지하지 않은 데 감사 중지를 하는 경우라고 할 때, 가장 많은 파행성 정회는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였다. 10월 13일 첫날부터 10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까지 줄곧 파행했다.

(5) 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이 많았던 위원회

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이 많았던 위원회는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로 4회였으며, 과방위(위원장 최민희)가 3회로 가장 많았다. 문체위(위원장 김교흥)는 2회였다.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능가한 두 후임 상임위원장

공교롭게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2022년 과방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법사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행횟수와 야당(정청래 위원장시에는 여당)과의 충돌에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을 능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10월 18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와 10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파행하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부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집행하였다.
- ② 최민희 위원장은 파행횟수와 심야 국감 진행횟수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능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관련해 정청래 과방위원장 시절에는 2022년 10월 4일 종일 '업무보고서 안주나'로 파행을 하였고, 10월 13일 방문진 등 국정감사에서는 간사와의 대립으로 파행을 하였는데, 이번 2025년도 과방위(최민희 위원장)는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욕설문자공개로 2일간 파행하였고,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으로 인해 파행성 연정을 벌이기도 하였다. 11시가 넘는 심야 국정감사는 최민희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크게 능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정 넘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7) 시기(정기국회 전) 및 기간(30일) 모두 법과 원칙 안 지키고 예외로 운영

19대 국회(2012년)에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즉,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진행하였고, 감사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 내외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더욱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는 명목 국정감사일수도 18일로 편성하였다.

«현행 국정감사법이 실시된 국정감사의 국감기간 현황»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제19대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2012	2012.10.5.(금)	2012.10.24.(수)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3	2013.10.14.(월)	2013.11.2.(토)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4	2014.10.7.(화)	2014.10.27.(월)	21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5	2015.9.10.(목)	2015.10.9.(금)	23일
제20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6	2016.9.26.(월)	2016.10.18.(화)	23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7	2017.10.12.(목)	2017.10.31.(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8	2018.10.10.(금)	2018.10.29.(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9	2019.10.02.(수)	2019.10.21.(월)	20일
제21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	2020.10.07.(수)	2020.10.26.(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1	2021.10.01.(금)	2021.10.21.(목)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2	2022.10.04.(화)	2022.10.24.(월)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3	2023.10.10.(화)	2023.10.27.(금)	18일
제22대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4	2024.10.7.(월)	2024.10.25.(금)	19일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2025	2025.10.13(월)	2025.10.30(목)	18일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 2025년도 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감사기간은 2025.10.31.(금)까지로 되어 있으나, 14개 상임위원회 모두 10.30.까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됨						

(8) 지난 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한 곳 3개 위원회

10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지까지 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상임위원회 중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위원회가 3개나 되었다.

이중 기재위(위원장 임이자)는 10월 21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10월 24일 현재 아직 본회의 의결은 되지 않았다.

2023년에 국정감사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나, 지켜지기는커녕 아직도 지키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위원장 김병기)와 산업위(위원장 이철규)가 지키지 않고 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안정보 시스템에는 없고, 9월 30일 국회 국정감사 정보 시스템에만 올라와 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된 위원회 (의결일자순)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20753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2025-01-15	2025-01-17	원안가결
220778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2025-02-14	원안가결
220847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2025-02-27	원안가결
2208458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2025-02-26	2025-02-27	원안가결
22083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2025-02-21	2025-02-27	원안가결
220826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2025-02-19	2025-02-27	원안가결
2208718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03-07	2025-03-13	원안가결
220867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05	2025-03-13	원안가결
221000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04-21	2025-05-01	원안가결
221147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2025-07-10	2025-07-23	원안가결
221282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2025-09-09	2025-09-25	원안가결
221261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2025-09-02	2025-09-25	원안가결
221257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	2025-09-01	2025-09-25	원안가결

참고로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를 시작한 15대 국회말부터 조사해 본 결과, 제20대 국회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2016년도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이후 여야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2023년에 국정감사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나, 지켜지기는커녕 선거 여파로 채택한 위원회가 5개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2023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나 되었다.

2022년도 결과보고서는 11군데만 채택하였다. 2021년도 결과보고서는 처리되지 않은 위원회가 교육위와 국방위였다.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위원회는 4곳이나 된다. 운영위, 교육위, 산업위, 환노위였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보고서가 여야의 입장차로 채택이 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법사위의 2023. 10. 13. 이탄희 전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표현) **국회**였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현황>>

국감조법 15, 16조 1: 채택, ○ : 미채택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국 회 운 영	2	0	1	1	0
법 제 사 법	2	1	1	0	0
정 무	4	1	1	1	1
기 획 재 정	3	1	1	1	0
교 육	0	0	0	0	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	1	1	0	0
외 교 통 일	3	1	1	1	0
국 방	2	1	0	1	0
행 정 안 전	4	1	1	1	1
문화체육관광	3	1	1	1	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2	1	1	0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	0	1	0	0
보 건 복 지	3	1	1	1	0
환 경 노 동	2	0	1	0	1
국 토 교 통	4	1	1	1	1
정 보	3	1	1	1	0
여 성 가 족	4	1	1	1	1
계	44	13	15	11	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8.4.17]

(8) 2025년도 국정감사의 감사위원 출석 실태

- ① 2025년 국정감사(2025년 10월 23일까지 국회공보 기준)에서 불참한 의원은 연인원 88명이었다.

- ② 김민석 국무총리(국방위)와 안규백 국방부장관(기재위) 등 7명의 국무위원도 청가로 불참했다.
- ③ 권성동 의원(보건복지위)은 수감 중으로 불참했다.
- ④ 장동혁 대표(산업위)는 10월 13일 산업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였으나 질의는 없었고 이후 국정감사장 출석은 없었다.
- ⑤ 정청래 민주당 대표(국방위)는 10월 23일까지 모든 국방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100% 출석하여 질의(질의통계는 21일까지)를 하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감 출석 국회에서의 질의현황»

감사일자	감사대상기관	질의횟수	질의시간
10월 13일	국방부	1	0:07:52
10월 14일	합동참모본부	2	0:13:50
10월 17일	방위사업청	2	0:13:59
10월 20일	병무청	1	0:07:08
10월 21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	1	0:06:52
계		7	0:49:41

※ 10월 21일 비공개요청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한 질의는 포함이 안됨

- ⑥ 국회의장 동반 출장으로 허영·박상혁 의원(정무위), 박정(기후노동위) 등이 불참했다.
- ⑦ 다른 출장으로 김선민(조국혁신당, 복지위), 윤재옥(국토위), 황희(국방위), 채현일(행안위) 의원 등이 불참했다.
- ⑧ 기타 청가로 김병주(국방위), 홍기원(외통위), 임호선(농해수위) 의원, 한정애(외통위) 의원 등이 불참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행안위)도 1회 결석했다. 박준태(법사위) 의원과 황명선(국방위)의원도 결석이 있다.

(9) 2025년도 국정감사 논란이 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① 이상경 국토1차관 (갭투자 논란, 사퇴)

이상경 국토1차관은 10·15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0월 19일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차관은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의 30억 원 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해 6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 등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고, 이상경 차관에 대해 23일 국정감사에서 사퇴촉구 내지 질타가 이어져 자진사퇴하자 대통령은 면직재가를 하였다.

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다주택 보유논란)

10월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과 관련해 "모두 가족과 관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빚어졌다.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과 다른 행태에서 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③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5개 범죄 무죄)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덧붙여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촉구를 받았다.

④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재명 대통령 선거재판 파기환송심 재개가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질문을 계속했다.

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계엄은 계엄일 뿐 논란)

국회 과방위의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계엄은 계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계엄을 내란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⑥ 유시춘 EBS 이사장 (자격 논란)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10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직윤리기준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직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겐 적용된 원칙이 유 이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230여 차례에 걸쳐 196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⑦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논란)

국정감사 직전 조직개편으로 직을 상실한 이진숙 전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는데, 국정감사 직전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과정이 논란이 되었다.

과방위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었으며, 10월 24일 행안위의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섯 차례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불청구됐다"는 답변도 있어 논란이 되었다.

⑧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선서거부 논란)

10월 24일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였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

는 안가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10) 2025년도 국정감사의 성과

- ① 상호주의 위반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필요 (행안위-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현재도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 ② 화재, 해킹 취약한 국가정보시스템 문제 부각 (행안위-행안부)
통신3사 해킹 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디지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킹을 효과적으로 막을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다.
- ③ 국감 전 터진 캄보디아 사태, 재외국민 보호 대책 점검(외통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었다.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도 이루어졌다.
외교부 측은 현장 인력 부족,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 한계 등 ‘구조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사태의 본질이 미흡한 외교 인력 배치, 대사관 운영, 구조 체계에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향후 정부는 대사관 공백 해소와 재외국민 보호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④ 공자학원 등 중국 스파이 문제 조명(교육위)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공자학원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강원대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중국의 체계적 선전 도구로 전략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공자학원이 우리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열린 중국어 손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한 시가 대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퇴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종합감사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현재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 여부는 강원대 총장뿐 아니라 교육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의원회별 국회의원 평균 질의시간 및 상임위원장 질의/발언시간 등 조사결과 (10.13~10.23. 국회 홈페이지 등재 영상회의록 기준)

(1) 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국회의원 질의시간보다 많았던 국정감사 8곳

상임위원장의 발언과 질의시간을 합친 시간이 감사위원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곳은 지난해와 같이 분석해 본 결과 모두 8곳 국정감사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곳,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1곳씩이었다.

《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의원들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장	감사일	대상기관	의원질시간 (평균)	위원장질의 /발언시간	의원질의 대비위원장 시간 비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최민희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	0:21:17	1:29:36	4.21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10.21.	한국철도공사	0:09:37	0:37:54	3.94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7.	군사법원	0:10:52	0:42:21	3.9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철규	10.20.	한국석유공사	0:14:15	0:54:53	3.85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7.	헌법재판소	0:06:42	0:24:44	3.6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최민희	10.23.	한국방송공사	0:19:06	1:03:09	3.31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23.	서울고등검찰청	0:19:01	0:59:43	3.14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0.13.	대법원	0:17:58	0:54:10	3.01

(2) 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국회의원 질의·발언시간 대비 10%이상인 국정감사장 20곳

위원장의 질의 및 발언시간이 전체 감사위원의 질의 및 발언시간 대비 10% 이상인 위원회 역시 많아졌다. 위원장이 활동이 많아 졌음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정감사 일정 중 1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정감사시간의 10% 이상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 질의/발언시간이 전체 의원마이크 점유시간의 10%이상이었던 국정감사장》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 시간	전체 의원시간 (위원장포함)	전체시간에서 위원장질의·발 언시간의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10.17.	헌법재판소	0:24:44	2:19:36	17.7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	1:29:36	8:28:59	17.60%
법제사법위원회	10.17.	군사법원	0:42:21	4:14:29	16.64%
국방위원회	10.17.	방위사업청	0:46:05	4:45:31	16.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3.	한국방송공사	1:03:09	7:21:29	14.30%
법제사법위원회	10.23.	서울고등검찰청	0:59:43	7:10:43	13.86%
국방위원회	10.2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0:15:07	1:56:00	13.03%
법제사법위원회	10.16.	감사원	0:40:39	5:13:31	12.97%
법제사법위원회	10.13.	대법원	0:54:10	7:02:43	12.81%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 시간	전체 의원시간 (위원장포함)	전체시간에서 위원장질의·발 언시간의 비율
국방위원회	10.13.	국방부	0:54:12	7:03:19	12.8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고용노동부	0:56:54	7:32:40	12.57%
교육위원회	10.20.	서울특별시교육청	1:02:23	8:20:41	12.46%
법제사법위원회	10.17.	법무부	0:49:33	6:52:49	1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0:54:22	7:43:27	11.73%
국토교통위원회	10.21.	한국철도공사	0:37:54	5:28:43	11.5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20.	한국석유공사	0:54:53	8:02:07	11.38%
국방위원회	10.20.	병무청	0:21:22	3:11:18	1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50:01	7:39:57	10.8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0.	방송미디어통신위 관련(YTN,TBS,연합뉴스 TV)	0:38:28	6:02:33	10.61%
국방위원회	10.14.	합동참모본부	0:29:40	4:50:23	10.22%

«위원회별 의원질의시간과 위원장 질의발언시간 비교 현황(64곳) >>

(통계: 2025. 10. 13~10.23, 영상회의록 질의발언 분류기준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	감사 일자	대상기관	감사 시작	감사 종료	의원질의 시간	위원장질 의·발언 시간	의원질의 대비 위원장시간
법제사법위원 회 (추미애)	10.17.	군사법원	15:17:00	20:45:00	0:10:52	0:42:21	3.90
	10.17.	헌법재판소	10:10:00	12:56:00	0:06:42	0:24:44	3.69
	10.23.	서울고등검찰청	11:16:00	22:34:00	0:19:01	0:59:43	3.14
	10.13.	대법원	10:13:00	23:24:00	0:17:58	0:54:10	3.01
	10.16.	감사원	10:17:00	20:24:00	0:14:36	0:40:39	2.78
	10.14.	법무부	10:08:00	22:02:00	0:19:14	0:49:33	2.58
	10.20.	서울고등법원	10:17:00	20:24:00	0:20:46	0:38:54	1.87
정무위원회 (윤한홍)	10.21.	대전고등검찰청	15:34:00	20:58:00	0:11:45	0:18:04	1.54
	10.13.	국무조정실	10:12:00	23:24:00	0:18:56	0:33:05	1.75
	10.20.	금융위원회	10:08:00	20:10:00	0:15:52	0:26:37	1.68
	10.14.	공정거래위원회	10:12:00	22:54:00	0:17:34	0:28:16	1.61
기획재정위원 회(임이자)	10.23.	한국자산관리공사	14:01:00	18:31:00	0:16:00	0:18:14	1.14
	10.13.	기획재정부	10:13:00	22:14:00	0:16:39	0:31:51	1.91
	10.16.	국세청	10:02:00	18:54:00	0:12:32	0:20:14	1.61
	10.21.	국가데이터처	10:00:00	19:56:00	0:14:12	0:14:28	1.02
교육위원회 (김영호)	10.14.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0:03:00	20:04:00	0:16:24	0:13:40	0.83
	10.20.	서울특별시교육청	10:02:00	24:12:00	0:24:24	1:02:23	2.56
	10.14.	교육부	10:06:00	23:55:00	0:24:56	0:47:10	1.89
	10.16.	한국고전번역원	10:09:00	20:29:00	0:21:21	0:27:53	1.3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 회(최민희)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07:00	24:30:00	0:21:17	1:29:36	4.21
	10.23.	한국방송공사	10:12:00	22:20:00	0:19:06	1:03:09	3.31
	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10:13:00	24:52:00	0:20:11	0:54:22	2.69
	10.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 TV)	15:31:00	23:41:00	0:15:16	0:38:28	2.52

위원회 (위원장)	감사 일자	대상기관	감사 시작	감사 종료	의원질의 시간	위원장질 의·발언 시간	의원질의 대비 위원장시간
	10.2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11:00	20:29:00	0:20:57	0:50:01	2.39
	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00	19:30:00	0:16:55	0:36:21	2.15
외교통일위원 회(김석기)	10.13.	외교통일부	10:12:00	23:24:00	0:20:53	0:29:15	1.40
	10.14.	통일부	10:05:00	23:51:00	0:22:36	0:15:16	0.68
국방위원회 (성일종)	10.17.	방위사업청	10:03:00	18:31:00	0:17:16	0:46:05	2.67
	10.21.	육군지상적전사령부	10:00:00	12:26:00	0:06:47	0:15:07	2.23
	10.13.	국방부	10:07:00	22:08:00	0:24:57	0:54:12	2.17
	10.20.	병무청	10:08:00	16:32:00	0:12:02	0:21:22	1.77
	10.14.	합동참모본부	10:01:00	18:01:00	0:16:50	0:29:40	1.76
행정안전위원 회(신정훈)	10.14.	행정안전부	10:03:00	24:29:00	0:22:05	0:46:47	2.12
	1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5:00	20:10:00	0:17:43	0:27:08	1.53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김교흥)	1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02:00	21:46:00	0:21:24	0:37:53	1.77
	10.22.	국립중앙박물관	10:03:00	18:09:00	0:16:07	0:26:32	1.65
	10.23.	한국콘텐츠진흥원	10:04:00	18:12:00	0:18:27	0:27:16	1.48
	10.14.	문화체육관광부	10:08:00	22:03:00	0:23:53	0:20:57	0.88
	10.16.	국가유산청	10:03:00	18:33:00	0:19:24	0:15:42	0.8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 회(여기구)	10.15	해양수산부	10:05:00	21:11:00	0:17:53	0:27:16	1.52
	10.14.	농림축산식품부	10:09:00	22:24:00	0:19:40	0:28:09	1.43
	10.17.	농촌진흥청	10:02:00	15:54:00	0:11:02	0:14:35	1.32
	10.22.	해양경찰청	10:08:00	17:57:00	0:15:03	0:19:34	1.30
	10.20.	산림청	10:10:00	18:27:00	0:16:22	0:14:27	0.8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이철규)	10.20.	한국석유공사	11:01:00	23:00:00	0:14:15	0:54:53	3.85
	10.13.	산업통상자원부	10:46:00	24:03:00	0:12:22	0:31:50	2.57
	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05:00	18:44:00	0:11:25	0:17:57	1.57
	10.14.	중소벤처기업부	10:07:00	22:43:00	0:14:10	0:22:07	1.56
	1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7:00	19:22:00	0:12:06	0:02:30	0.21
보건복지위원 회(박주민)	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09:00	20:06:00	0:15:40	0:31:10	1.99
	10.17.	국민건강보험공단	18:08:00	20:48:00	0:15:36	0:30:43	1.97
	10.14.	보건복지부	10:04:00	22:58:00	0:17:39	0:32:52	1.86
	10.15.	보건복지부	10:18:00	21:35:00	0:18:10	0:23:34	1.30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0:14:00	21:07:00	0:14:41	0:15:32	1.06
기후에너지환 경노동위원회 (안호영)	10.15.	고용노동부	10:04:00	23:06:00	0:21:55	0:56:54	2.60
	10.17.	기상청	10:04:00	11:51:00	0:05:27	0:09:01	1.65
	10.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07:00	18:54:00	0:19:41	0:27:08	1.38
	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0:08:00	22:15:00	0:23:43	0:21:42	0.92
	10.23.	한국에너지공단	10:07:00	18:18:00	0:19:02	0:14:53	0.78
국토교통위원 회(맹성규)	10.21	한국철도공사	10:04:00	19:03:00	0:09:37	0:37:54	3.94
	10.13.	국토교통부	10:05:00	24:11:00	0:17:17	0:37:59	2.20
	10.23.	한국부동산원	10:02:00	19:05:00	0:12:44	0:14:03	1.10
	10.16.	한국도로공사	10:08:00	19:43:00	0:13:11	0:10:56	0.83
	10.14.	한국토지주택공사	10:09:00	22:29:00	0:16:04	0:11:04	0.69

전체 위원회별 위원장 질의발언시간이 전체 의원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황

위원회	감사 일자	대상기관	위원장질의/ 발언시간	전체 질의/발언시간	위원장질의·발 언시간이 전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법 제 사 법 위 원회 (추미애)	10.17.	헌법재판소	0:24:44	2:19:36	17.72%
	10.17.	군사법원	0:42:21	4:14:29	16.64%
	10.23.	서울고등검찰청	0:59:43	7:10:43	13.86%
	10.16.	감사원	0:40:39	5:13:31	12.97%
	10.13.	대법원	0:54:10	7:02:43	12.81%
	10.14.	법무부	0:49:33	6:52:49	12.00%
	10.20.	서울고등법원	0:38:54	6:48:38	9.52%
	10.21.	대전고등검찰청	0:18:04	3:48:20	7.91%
정무위원회 (윤한홍)	10.13.	국무조정실	0:33:05	7:57:35	6.93%
	10.20.	금융위원회	0:26:37	6:44:27	6.58%
	10.14.	공정거래위원회	0:28:16	7:26:42	6.33%
	10.23.	한국자산관리공사	0:18:14	6:37:27	4.59%
기 획 재 정 위 원회 (임이자)	10.13.	기획재정부	0:31:51	7:17:20	7.28%
	10.16.	국세청	0:20:14	5:38:01	5.99%
	10.21.	국가데이터처	0:14:28	6:07:21	3.94%
	10.14.	기획재정부(조세정책)	0:13:40	7:06:23	3.21%
교육위원회 (김영호)	10.20.	서울특별시교육청	1:02:23	8:20:41	12.46%
	10.14.	교육부	0:47:10	8:02:11	9.78%
	10.16.	한국고전번역원	0:27:53	6:30:53	7.13%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위원회 (최민희)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29:36	8:28:59	17.60%
	10.23.	한국방송공사	1:03:09	7:21:29	14.30%
	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0:54:22	7:43:27	11.73%
	10.2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50:01	7:39:57	10.87%
	10.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 TV)	0:38:28	6:02:33	10.61%
	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6:21	6:16:55	9.64%
외 교 통 일 위 원회(김석기)	10.14.	통일부	0:15:16	8:07:23	4.64%
	10.13.	외교통일부	0:29:15	8:03:19	4.32%
국방위원회 (성일종)	10.17.	방위사업청	0:46:05	4:45:31	16.14%
	10.21.	육군지상적전사령부	0:15:07	1:56:00	13.03%
	10.13.	국방부	0:54:12	7:03:19	12.80%
	10.20.	병무청	0:21:22	3:11:18	11.17%
	10.14.	합동참모본부	0:29:40	4:50:23	10.22%
행 정 안 전 위 원회 (신정훈)	10.14.	행정안전부	0:46:47	8:44:46	8.92%
	1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7:08	7:04:15	6.40%
문 화 체 육 관 광위원회 (김교흥)	1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0:37:53	6:55:04	9.13%
	10.22.	국립중앙박물관	0:26:32	4:57:21	8.92%
	10.23.	한국콘텐츠진흥원	0:27:16	5:32:43	8.20%
	10.14.	문화체육관광부	0:20:57	7:15:58	4.81%
	10.16.	국가유산청	0:15:42	5:27:05	4.80%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원회 (어기구)	10.15.	해양수산부	0:27:16	6:01:18	7.55%
	10.17.	농촌진흥청	0:14:35	3:36:48	6.73%
	10.14.	농림축산식품부	0:28:09	7:02:49	6.66%
	10.22.	해양경찰청	0:19:34	5:13:38	6.24%
	10.20.	산림청	0:14:27	5:29:48	4.38%
산 업 통 상 자	10.20.	한국석유공사	0:54:53	8:02:07	11.38%

위원회	감사 일자	대상기관	위원장질의/ 발언시간	전체 질의/발언시간	위원장질의·발 언시간이 전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 중 소 벤 처 기 업 위 원 회 (이철규)	10.13.	산업통상자원부	0:31:50	7:22:36	7.19%
	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17:57	6:01:26	4.97%
	10.14.	중소벤처기업부	0:22:07	7:29:03	4.93%
	1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02:30	6:11:45	0.6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박주민)	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31:10	6:43:34	7.72%
	10.17.	국민건강보험공단	0:30:43	6:56:33	7.37%
	10.14.	보건복지부	0:32:52	7:34:25	7.23%
	10.15.	보건복지부	0:23:34	7:45:12	5.07%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0:15:32	6:18:30	4.10%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안호영)	10.15.	고용노동부	0:56:54	7:32:40	12.57%
	10.17.	기상청	0:09:01	1:36:20	9.36%
	10.2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0:27:08	6:01:20	7.51%
	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0:21:42	7:02:03	5.14%
	10.23.	한국에너지공단	0:14:53	5:19:29	4.66%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맹성규)	10.21.	한국철도공사	0:37:54	5:28:43	11.53%
	10.13.	국토교통부	0:37:59	9:18:48	6.80%
	10.23.	한국부동산원	0:14:03	6:53:49	3.40%
	10.16.	한국도로공사	0:10:56	7:00:11	2.60%
	10.14.	한국토지주택공사	0:11:04	8:05:42	2.28%

<끝>